

□ 확산 일로의 북핵 위기, 어디로 가나?

1. 북미 대립 속에 북핵 위기 확산

○ 6자회담 중단 1년을 앞두고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에 대해 미국도 UN 안보리 회부 시사 등의 강경책으로 맞대응함으로써, 북핵 위기는 '말 對 말'에서 '행동 對 행동'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

- (북한) 핵 보유 선언과 5MW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, 폐 연료봉 재처리 시사 등을 통해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음

- 북한은 외무성 성명의 핵 보유 및 6자회담의 무기 불참을 선언(2. 10)한 데 이어, 김정일 위원장과 왕자루리(王家瑞) 중국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(3. 1)에서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 시인하였음
- 이를 토대로,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도 핵 보유국인 만큼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서의 핵 문제 협의와 '6자회담의 군축회담으로의 전환'(3. 31)을 주장함
- 4월에 들어서는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, 폐 연료봉 재처리 시사 등을 통해 핵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음
- 북한의 의도는 핵 보유를 통한 군사력 강화도 있겠지만, 위기 고조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 보장과 보다 많은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'협상력 제고' 목적의 '벼랑끝 전술'의 일환으로 평가됨
- 특히, 부시 2기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 및 위기 의식과 함께, 향후 4년간 지속될 국제적 고립과 대외 경제 지원 축소를 벗어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

- (미국)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 보도 이후, 미국은 연초의 대북 적대감 표현 자제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시사와 김 위원장에 대한 직설적 비난 발언 등의 강경 분위기로 선회함

- 백악관 대변인과 라이스 장관에 이어 부시 대통령도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공식 표명하였으며,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함
- 특히, 북한이 라이스 장관의 '폭정의 전초기지'(outposts of tyranny) 발언 취소를 회담 재개 조건 중의 하나로 요구한 상황에서, 부시 대통령은 김 위

- 원장에 대해 ‘폭군’(tyrant)과 ‘위험한 사람’(dangerous person)이라고 호칭함
  - 이는 그동안의 중동 평화 우선 및 한반도의 현상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함
  - 즉, 6자회담의 장기공전 속에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까지 겹쳐, 미 의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시의 대북정책 실패와 6자회담 무용론이 본격 제기되기 전에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불가피한 압박 조치로 해석됨
  - 나아가 북핵 문제의 적극적 관심 표명을 통해 UN 안보리 상정을 위한 국제적 ‘명분 쌓기’ 의도도 포함된 듯함
  - 한편,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 문제와 별개가 아니므로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되면 6자회담에서 이 문제도 함께 다룰 방침임을 시사함
  - 그러나 미국은 “6자회담의 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”이며 ... “안보리 회부는 참가국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조치”라고 언급함으로써 아직은 행동보다는 ‘북한의 6자회담 복귀’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함
- (주변국 반응) 한국과 중국은 북핵 안보리 회부와 경제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반면, 일본은 6자회담 복귀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‘다른 수단’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임
- 중국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반대하면서, 미국에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명분 조성을 위한 유연한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음
  - 한국도 UN 안보리 회부에는 반대하나, “북한이 핵실험까지 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며” ... 남북관계에서도 “쓴 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”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은 양면적 입장을 표명

## 2. 향후 북핵 시나리오 전망

- (단기 전환점) UN총회가 개최되고, 가동 중단된 원자로에서의 폐 연료봉 추출 및 재처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~9월이 1차 고비임
- 북한의 추가적 조치 이행과 이에 따른 미국의 반응이 관건이나, 북미 모두 즉각적인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  - 이는 북미 양자 모두, 북핵 문제의 UN안보리 회부와 경제제재에 대한 효

과를 확신할 수 없고, 북한의 상황 악화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임

- 북한이 추가적인 악화 조치만 취하지 않는다면, 북미 양자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한중 정상회담(5. 9)과 한미 정상회담(6~7월중) 등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중재 노력이 보다 본격화될 것임
-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 중재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경우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어 타협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나,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임

○ (향후 전망) 북미 양자간 입장 차와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북핵 문제는 긴장 속에 대치 상태가 지속되는 '교착' 가능성이 높음

- (낙관적 : 조기 타결) 북미 모두가 상호 양보하는 경우로,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무드 조성이 기대되나,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

- 북한의 핵 포기 및 국제 사찰 수용과 미국의 낮은 단계의 평화 공존(플루토늄 우선 협상 및 체제 보장) 선언으로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는 경우임
- 이럴 경우, 주변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비롯하여 북일 수교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협의, 단계적 북미 외교 관계 수립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
- 논의의 출발은 3차 6자회담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, 미국은 3차회담에서 북한이 핵 동결 이후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핵 폐기 이행 절차를 밟을 경우, 대북 중유 제공과 경제제재 해제 협의 개시, 잠정적 다자 안보 보장 제공 등을 제의한 바가 있음
- 이럴 경우, 6자회담은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간 지역안보협력기구로 발전되고, 남북관계와 경협도 급속히 진전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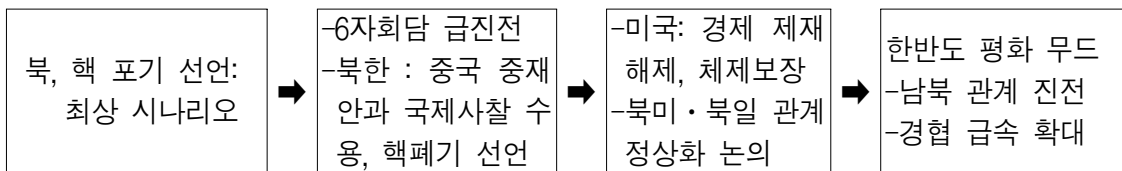
- (중립적 : 교착 지속) 미국의 다자간 압박과 북한의 버티기로 '氣 싸움'이 지속됨으로써 북핵 문제가 '교착 혹은 중장기화'되는 경우로, 한반도는 현재와 같이 긴장 속의 대치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

- 6자회담이 장기간 재개되지 않거나, 재개되더라도 북미간 입장 차와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경우임
-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'조건 성숙론'을 제기한 만큼,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어야 움직일 것으로 보아 당장의 6자회담 성과는 어려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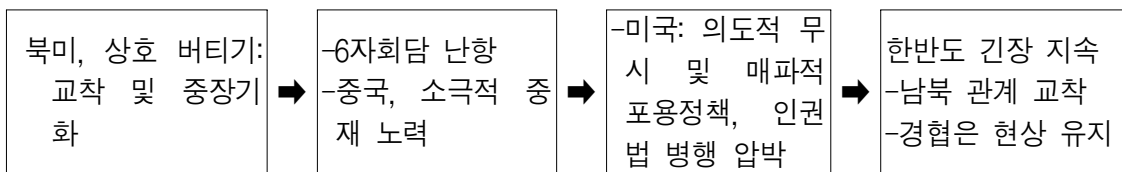
-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의 비난 발언 직후, “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핵 문제의 해결도 북미 관계의 어떤 진전도 기대하지 않는다”고 밝힘
  - 미국도 유화 중심의 소극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북한에게 핵 개발 시간만 제공했다는 비난 등을 고려하여,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둔 ‘매파적 포용정책’(hawkish engagement)을 강화할 것임
  - 이 과정에서 미국은 UN 안보리 상정보다는 의장 성명이나 동맹국의 다자틀을 이용하여 교역 품목 및 대북 송금의 제한, 북한 선박의 입항 검사 강화 등의 가벼운 비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
  - 또한, 단기적인 대응과 성과보다는 인권 문제의 국제화와 외교적 고립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변환(regime transformation)을 시도할 것임
- (비관적 : 상황 악화) 북한이 한계선(red line)을 넘고 미국도 대북 강경책으로 맞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려되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음

< 북핵 시나리오 전망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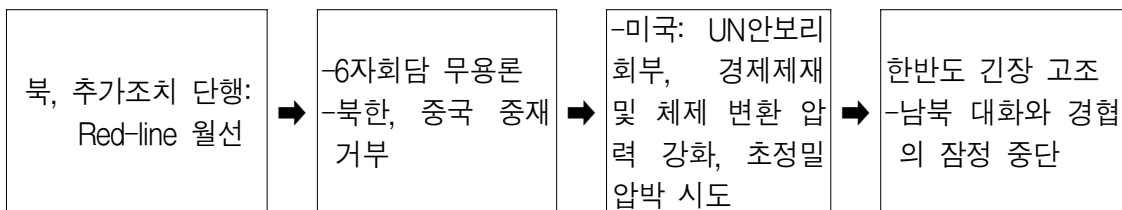
① 낙관적 전망 : 조기 타결



② 중립적 전망 : 교착 및 중장기화



③ 비관적 전망 : 상황 악화로 파국



-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고 플루토늄 추출 및 재처리나 핵·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, 제3국으로의 핵 물질 이전 등의 잠정적인 한계선을 넘을 경우임
- 미국도 전면적인 금융·경제제재 강화를 비롯하여, 해상 봉쇄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(PSI) 강화, UN 안보리 상정, 나아가 국지적인 초정밀 공습(surgical strike) 단행 등의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임
- 그러나, 미국의 중동 평화 우선 정책 추진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, 추가적 전쟁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음
- 다만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략과 일본을 통한 미국의 중국 견제 역할 및 비용 분담 요구와 맞아떨어져, 일본으로 하여금 PSI 강화와 합동군사훈련 등을 촉발시킴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긴장과 갈등은 고조될 것임

### 3. 남북 관계 및 경협에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

- (영향)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면서, 남북 관계 개선과 추가적인 경협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과 속도 조절이 우려됨
- (남북 관계)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과의 병행 추진 원칙으로 당국간 회담과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확대에는 차질이 예상됨
  - 2005년은 광복 60주년과 남북정상회담 5주년인 만큼, 북한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가려고 할 것임
  - 그러나,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당국간 회담과 예년 수준 이상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에는 차질이 예상됨
- (남북 경협) 북핵 문제의 추가적 상황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지장이 없겠지만,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확대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
  - 미국의 조율 요구와 우리 정부의 '북핵 해결 없이는 추가적인 대규모 경협 계획이 없다'는 입장으로,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협 확대에 차질이 예상됨
  - 이로 인해 개성공단 본공단의 분양과 조성, 금강산 지구의 휴양·숙박 시설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 등의 신규 사업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

-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이 추가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경우에는 바세나르 협약과 수출금지적 성격의 超관세 규정인 Column II의 엄격한 적용으로 전략물자 반출과 수출 시장 개척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
- (대응) 북핵 상황이 악화되거나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북미 양측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,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
-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균형 속에, 북한에게는 해결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핵 포기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함
  - 미국과는 다양한 한미 동맹 채널 확보와 굳건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간 인식의 격차를 축소함과 아울러,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
  - 또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협상의 틀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,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북한의 '합리적 우려'를 해소해줄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여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
  - 예컨대, 남북 평화조약 체결 하에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일·중·러의 보장과 미국의 묵인(2 + 3 + 1), 6자회담 속의 북미 회담(2 in 6)과 다자 틀 속에서의 단계적 북핵 해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
-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  -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은 핵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아니라, 해결을 앞당기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됨
  - 특히 남북 경험은 남북관계 개선과 제도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을 뿐 아니라, 중국이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남북 경험 중단 등의 압박 정책은 그 효과는 물론 한국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음에 유의

홍순직 수석연구위원 (3669-4182)